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86회 임시회>

2010. 3. 25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백 진 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3월 22일

2. 제 출 자 : 서정우, 정명자 의원

3. 개정이유

- 의원 신분증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산뜻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코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변경
- 기재사항에 “직위” 추가(안 제3조제1항)
 -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 의원증 번호, 직위, 인적사항
- 서식 및 규격 등 변경(안 제3조, 별표)
 - 재질: 인쇄용지 → P.V.C 카드로
 - 규격: 가로 8.1cm, 세로 5.5cm → 가로 8.5cm, 세로 5.4cm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의원 신분증의 재질을 훼손되기 쉬운 종이에서 P.V.C 카드로 변경하여 휴대성 및 보관성 등을 용이하도록 하고, 신분증의 규격·제식·색상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우리사회에 보편화된 각종 신분증 제작 추세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3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화원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건설도시국의 분장 사무에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빈면 보건지소의 지번이 합필됨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건설도시국 분장 사무에 화원 자연휴양림 추가 (안 제7조)
 -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빈면 보건지소의 소재지 변경 (안 제8조 “별표1”)
 - 현 행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865
 - 변 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559-6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화원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분장 사무에 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하빈면 보건지소의 지번이 합필되어 그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화원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에 근거하여 업무의 대강인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의 근거규정에 의거 담당사무를 기존 비슬산 자연휴양림 업무부서인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분장토록 하였고,
- “알기쉬운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조례의 자구 및 용어의 순화를 위해 본 조례상에 포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인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여 본문의 명시적 내용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하빈면 보건지소의 지번 합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근거 규정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성안 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 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3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장)

3.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증원 가능 인력 중 화원자연휴양림 개장, 일자리 창출, 새주소 전환사업, 읍·면 현장행정 강화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총 정원을 658명에서 676명으로 18명을 증원함 (안 제2조)

1) 집행기관 : 664명 (종전 646명 : 증 18)

○ 일반직 15명 (6급 5, 7급 5, 8급 4, 9급 1)

○ 연구직 1명 (연구사 1)

○ 기능직 2명 (10급 2)

2) 의 회 : 12명 (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함 (안 제4조)

1) 본 청 : 380명 ⇒ 391명 (증11명)

○ 일반직 : 증 8 (6급+2, 7급+5, 8급+1)

○ 연구직 : 증 1 (연구사+1)

○ 기능직 : 증 2 (10급+2)

- 2) 의회사무과 : 12명 (변동없음)
- 3) 직속기관 : 99명 (변동없음)
- 4) 읍 : 77명 \Rightarrow 78명 (증1명)
 - 일반직 : 증 1 (8급+1)
- 5) 면 : 90명 \Rightarrow 96명 (증6명)
 - 일반직 : 증 6 (6급+3, 8급+2, 9급+1)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12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된 2010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2008년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되었던 정원 중 읍·면에 우선 배치하고,

- 화원자연휴양림 개장, 일자리 창출, 새주소 전환사업, 읍·면 현장행정 강화 등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보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군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되며,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추계비용이 747,724천원으로 재정부담 능력에 차질이 없음.
- 따라서 공무원 정원 증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점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0년 3월 1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토지정보과장)

3. 개정 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
-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군수가 고시하고, 달성군 새주소 위원회를 달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 「도로명주소법」 개정 및 시행(2009. 7. 2시행)으로 조례명 변경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

	현행	개정안	비고
용어	도로명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안 제2조, 제12조, 제15~19조, 제29조
	도로명시설	도로명주소시설	
	건축물 등	건물 등	
안내시설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안 제23조

-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8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고시함
 - 제작비용의 산정은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 수입증지로 징수
-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 가능
- 달성군 새주소위원회를 달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안 제2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당초의 조례명과 용어 등
을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마련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로명” 및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음.
- 또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마련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